

귀농·귀촌 의사결정 고취를 위한 정보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원석*, 최주원*, 이정재*, 신용태**

*송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

wsmjmy@naver.com, sylph0721@naver.com, kmastar@naver.com, shin@ssu.ac.kr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upport System to Promote Decision Making in Rural and Rural Areas

Won Suk Lee*, Joowon Choi*, Jungjae Lee*, Yongtae Shin**

*Dept. of IT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Soongsil University

요 약

한국 농업·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의 감소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의사결정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귀농·귀촌 시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정보 및 제반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방안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한국 농업·농촌은 스마트 팜을 중심으로 정밀농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ICT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유입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의 감소 그리고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으로 421만 명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약 22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율이 1999년 21.1%에서 2019년도에는 46.6%로 증가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18년도 64.9%에서 2019년도에는 64.1%로 0.8%p 정도의 감소가 전망되며, 2029년에는 61.9%로 연평균 0.2%p 정도가 감소하여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1, 2].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55~63년생) 세대의 47.8%가 귀농이나 귀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 이같은 귀농·귀촌 의사가 실제 귀농·귀촌의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농가인구 감소 그리고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 격차 등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현황과 귀농·귀촌을 위한 의사결정 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1> 농가인구,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

구분	1999년	2018년	2019년	2029년 (추정)
농가인구(만 명)	421	231.5	224.5	191.5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21.1	44.7	46.6	55.7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83.2	64.9	64.1 (추정치)	61.9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와 농업전망 2020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농가인구는 1999년 기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정부가 통계조사에 사용하는 귀농인은 농어촌에 이주해서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전입신고 또는 이장 확인

으로 집계되고 있다[4].

또한 정부 통계조사 시 사용하는 귀촌인은 전원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농어촌에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로는 사업자나 회사원 등의 직업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둘째로는 별도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는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넷째, 별도로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서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하고 농촌으로 이주해서 직업이 아닌 자급자족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귀촌자라 할 수 있다[4].

2.2 선행연구

인구이동 이론에는 중력모형, 선별성 모형, 압출 흡입모형 등 여러 이론이 존재하며, 인구이동의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 유래한 압출흡입모형은 지역 간 인구의 이동을 유발되는 지역의 압출요인과 유입되는 지역의 흡입요인 상호간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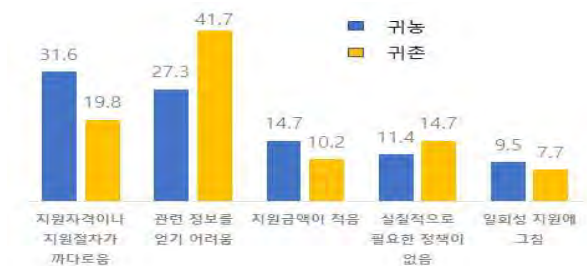
귀농·귀촌을 위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오수호는 도시압출요인으로 실직이나 사업실패 그리고 도시생활에 대한 염증 등, 농촌흡입요인으로 건강관리나 밝은 농업전망, 노후대비나 쾌적한 환경, 이상적 삶 등을 제시하고 있다[6]. 또한 손능수 외 1명은 귀농동기로 건강이나 도시적 삶 탈피, 전원생활 동경과 여가생활, 자녀교육이나 일자리, 농사 전업이나 소득, 생태적 삶이나 영농승계, 생활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7], 김성수 외 5명은 도시압출요인으로 사업실패나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등, 농촌흡입요인으로 노후대비와 인간다운 삶, 건강이나 전원생활, 영농승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8]. 서규선 외 1명도 도시압출요인으로 소음이나 높은 물가, 주택난이나 환경오염 등, 농촌흡입요인으로 적은 생활비, 쾌적한 자연환경 및 조용한 전원생활 등으로 분류하여 귀농이나 귀촌의 의사 결정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9].

3. 귀농·귀촌 현황

2019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11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1만 가구를 넘었으며, 귀농 가구가 '19년에는 11,422가구, 귀촌인 가수도 '19년에 317,660가구로 조사되었다[10].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귀농·귀촌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서 2009년부터 농지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용자나 교육 그리고 다양한 정보제공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 성공사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영농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이주지역 선정에 대한 여러 정보의 부족 등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어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귀농에는 평균 25.1개월이 소요되고 귀농가구 중 59.9%가 귀촌가구 중에는 21.1%가 귀농·귀촌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귀농가구의 27.3%와 귀촌가구의 41.7%가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음이 (그림 1)과 같이 조사되었다 [11].



(그림 1)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

4. 의사결정 정보 지원체계 구축 및 설계

4.1 의사결정 정보 지원체계 구축 방향

귀농·귀촌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이슈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귀농인, 예비 귀농인 그리고 귀농·귀촌 상담센터의 상담사 및 담당 공무원들을 인터뷰하였다[12]. 그 결과 귀농·귀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지원체계 구축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도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행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형태로 수집되는 데이터는 Open-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당해 연도의 귀농 정책정보나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정보 등은 즉시성 있게 현행화해야 한다.

둘째, 유사 귀농인 분석정보 기반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나 귀농·귀촌 희망자 정보 DB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셋째는 귀농 희망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타 부처의 데이터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즉, 귀농 희망자가 필요한 지역 내 보건복지부의 보건 인프라 정보, 국토교통부의 토지매입, 교통정보, 지자체의 기술센터 교육정보, 건강보험공단의 직장·지역가입자 정보 등 부처 간 협조체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축 중에 있는 지능형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챗봇 등 지능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2].

4.2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결정 요인 분석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한 귀농·귀촌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결정 요인들과 귀농인, 예비 귀농인, 귀농·귀촌 상담센터의 상담사 및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결정 요인의 후보들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5, 12, 13].

<표 2> 의사결정의 결정 요인 후보

요인	세부 요인
도시압출 요인	사업실패, 은퇴나 퇴직, 일자리, 도시생활의 염증, 물가, 주택 및 교통문제, 환경오염, 인간관계, 자녀교육 등
농촌흡인 요인	생태적 삶 추구, 건강, 자연환경, 전원생활 동경과 여가생활, 연고지, 자녀교육, 지인 권유, 웰빙 생활, 낙관적 농업전망, 친환경 농업 추구, 영농 승계 등
정책적 요인	관련 정책정보 제공, 정책 절차 간소화, 영농교육 및 영농지원, 정착지원, 정보 제공, 판매망 구축, 농산물 가격 보장, 시·군청 지원 체계, 영농 지역조합 정보 등

5. 결론

본 논문은 귀농·귀촌의 현황 파악을 통해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귀농·귀촌 의사결정 고취를 위한 결정 요인 후보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귀농·귀촌을 위한 의사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주지역 결정을 위

한 요인들도 조사하여, 의사결정과 함께 이주지역 결정을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Delphi기법이나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런 연구들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국순용, 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김문희, 이수환, “2020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20, pp. 4-38, 2020

[2] 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0

[3] 농림축산식품부, “2019 귀농·귀촌 실태조사 보고서”, 2020

[4] 박문호, 임지은, 서환성, 황재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 방안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41(4), pp. 795-820, 2014

[5] 우성호, “귀농·귀촌의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6] 오수호, “귀농·귀촌 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7] 손능수, 이재모, “경상북도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와 정책 방안”, 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 보고서, 2012

[8] 김성수, 정지웅, 임형백, 고운미, 김정태, 이성,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 11(1), pp. 53-65, 2004

[9] 서규선, 변재면,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pp. 137-153, 2000

[10] 통계청, “2019 귀농어·귀촌 통계”, 2020

[11] 농림축산식품부, “2019 귀농·귀촌 실태조사보고서”, 2020

[12] 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식품 정책콘서트 발표자료 및 보고서”, 2018

[13] 강봉임, “귀농·귀촌인 주거지 선택 기준에 대한 AHP 분석 연구-전라남도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4), pp. 1-8, 2017